

## 염한웅 부의장, "대학이 변해야 하는데...변화 유도 쉽지 않다" 토로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0-12-21 18:53 송고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2019.9.27/뉴스1

"대학 변화를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이 2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뉴스1>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염한웅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영상회의로 주재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IST를 방문했다.

염 부의장은 젊은 연구자 처우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캠페인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하는데 소재·부품·장비과 감염병 대응 등 현안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과학자 처우 문제에 대해) 대학이 많이 변해야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과 이야기했지만, 대학 변화를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그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대학원생 권익을 위한 활동을 했다. 지금까지 안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두 법률은 경북대 화학 실험실 폭발 사고 피해 대학원생들이 안전망 바깥에 있다는 지적을 계기로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등이 대표 발의했다. 대학원생을 비롯한 학생연구원에게 산재보험의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는 반영할 시간이 없었다"며 "내후년 예산에 많이 들어가야하는데 산자부와 조율이 필요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을 심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제도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염 부의장은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후 계속해서 부의장직을 맡아,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등의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이 다뤄졌다.